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학생들이 꼬치구이를 구입해 먹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량식품 오염된 '그린푸드존'

문구점 등 원산지 불분명한 간식류 버젓이 판매

시행 2년 단속 헛바퀴... 어린이 건강 위협

학교 주변 200m 내 업소에서 정서 저해식품 및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으나 여전히 겉돌고 있다.

문구점 등이 불결한 환경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로 만든 튀김 등 간식류를 파는 것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해롭다고 알려진 합성착색료(치자계 색소 등) 등을 다양 함유한 과자류를 버젓이 팔고 있다. 불법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업소도 있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광주시 전역에서 '그린푸드존'으로 설정된 곳은 초·중·고교 240곳으로, 이 구역 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문구점 등은 모두 1351개소에 이른다. 광주시는 매일 2차례 130여명의 단속원들이 이들 업소를 방문, 꾸준히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일보 취재 결과, 일부 초등학교 앞 문구점과 영세 문구점들은 고열량·저영양의 조악한 제품을 진열하거나, 무허가로 조리 시설을 갖춰놓고 간식류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17일 오후 동구 A초등학교 후문 앞 한 문구점,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문구점 안쪽에서는 만두와 튀김, 떡볶이, 꼬치구이와 같은 조리된 음식들이 여기저기 진열돼 있었다.

문구점들은 음식을 조리할 때 튀기 기름이 묻지 않도록 신문지로 덮어 있었지만, 정작 판매되는 음식은 별도 케이스에 보관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위생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500원~1500원의 선값에 이끌려 가게 앞에 앉아 튀김을 즐겼다.

점심시간 이 문구점에 들른 한 어린이에게 이 문구점에서 자주 음식을 사먹느냐고 묻자 "하교시 거의

매일 들른다"고 말했다. 서구 B초등학교 앞 한 문구점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 있었다.

이 문구점은 아예 가게 밖에 펼쳐 놓은 좌판에 간식류를 올려놓고 팔았다.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투명 플라스틱 통에는 원산지가 불분명, 조리시절도 모를 김치만두가 붙여진 채 가득 차 있었다. 1개에 100원에 팔리는 이 만두는 방과 후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불타나게 팔리고 있었다.

어린이들의 풍돈을 노린 100~200원짜리 과자도 문제였다. 서구 C초등학교 정문의 한 문구점은 40여 가지가 넘는 초콜릿과 견, 사탕, 스낵류의 불량과자를 좌판에 가득 펼쳐놓고 하고하는 학생들의 주머니를 노렸다.

원산지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심지어 칠레산까지도 있었다. 이 과자들은 국내 유명제과명을 흉내낸 이름과 조악한 인쇄의 포장지에 들어 있어 제품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었다. 또 유통기한과 원산지는 표시돼 있었으나 대부분의 과자가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아 제조일자·원산지 표시 규정의 준수 여부도 불투명했다.

특히 스낵류나 사탕류는 포장 뒷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합성착색료와 합성착향료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명 'MSG'로 알려진 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나트륨)도 포함돼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속한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근본적인 처방을 못 내리고 있다"며 "문구점 등에서 판매중인 불량식품들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그린푸드존' 1만344개의 업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도의장 선거 '뒷돈'

전·현 도의원 10명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지난 2006년 치러진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 10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7일 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모 의원 등 전·현직 도의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06년 6월 제8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모 전 의장으로부터 "당선료"로 이모 의원 등 3인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현금 5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의원 가운데 전직 도의원 1명을 제외한 전·현직 의원 9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께 김 전 의장에 대한 해수담수화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변 의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 의혹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전비물수수죄에도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3년이 만료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공사장 사망사고 속출

광양 LNG저장고 보수공사 인부 추락사 하천정비 중 매몰 등 광주·전남 4명 숨져

봄철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30분께 광양시 태인동 모 회사 LNG저장고 보수공사 현장에서 고가사다리를 타고 작업중이던 조모(54)씨가 2m 아래로 추락한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으나 숨졌다.

조씨는 이날 LNG저장고에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40분에는 광양시 중앙읍 한 하천정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황모(54)씨가 3m 높이의 흙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흩어

뿔혀 숨졌다. 또 지난 14일 오전 9시에는 광주시 남구 양과동 모 회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지모(65)씨가 크레인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근 묶음(50개, 2t 무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철근 묶음이 중심을 잃어 지씨의 머리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에도 광주시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과학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지병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황모(50)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새벽 3시 귀가 20대 여성

성추행 당하고 돈 빼앗겨

광주 쌍촌동서

새벽시간대 귀가중이던 20대 여성이 괴한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A(여·24)씨의 몸을 만진 뒤

현금 5만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에서 A씨는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남성 2명이 갑자기 성추행하고 가방까지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170cm 가량의 키에 모자와 운동복을 착용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임신부 납치 금품 빼앗아

북부경찰, 3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임신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정모(35)씨를 특수수도 혐의로 불검압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대형마트 2층 주차장에서 소풍을 하고 귀가 하러는 임신부 조모(여·30)씨를 흥

기로 위협해 반지와 목걸이, 현금 5만원 등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조씨가 차에 타려는 순간 조씨를 주수적으로 밀어 넣고 30여분간 이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며 위협하다가 범행 현장 인근에 조씨와 차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창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 감청과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언론기관의 도청 내용 보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불법 감청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보도 목적이 있거나,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뚜렷해

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고 도청 자료 입수 과정에서 사레비를 지급하는 등 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 기사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환경실태 조사 빙자 금품 뜯은 2명 검거

여수경찰은 17일 석산 현장의 환경훼손 등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서울 모 환경단체협회 본부장 이모(4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환경단체 여성시지회장 정모(40·여수시)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여수시 소라면 모 돼새골채취현장을 찾아가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을 문제 삼아 현장 사진을 촬영한 뒤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환경단체의 본부장과 여수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실태조사를 빙자해 외지인의 왕래가 드문 석산 등을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아내 왜 안와?” 결혼업체서 행패

○베트남 출신 아내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인 40대 노총각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호남동 모 결혼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이 회사 직원 박모(42)씨와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아내의 입국이 미뤄지자 중개업체를 찾아가 시비를 벌였는데, 이씨는 "이달 초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던 아내가 오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일